

목포공고·해남공고 '마이스터고' 신규 지정

각 2년 50억 지원...지역 첨단산업 인재 양성 탄력 AI에너지·AI산업인프라 직업 특화교육 과정 운영

전남의 목포공업고등학교와 해남공업고등학교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인 마이스터고로 신규 지정되면서 지역 첨단 산업 인재 양성에 탄력이 붙게 됐다. 교육부는 16일 목포공고와 해남공고를 포함한 전국 6개 특성화고를 마이스터고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마이스터고는 산업계 수요에 맞춘 교육 과정을 기업과 함께 설계·운영하는 직업

교육 특화 학교로, 이번에 선정된 학교들은 준비 과정을 거쳐 2028년 3월 개교할 예정이다. 이번 심사에서는 부산전자공고, 용인반도체마이스터고, 이리공업고 등 3개교가 지정 동의를 받았고, 목포공고와 해남공고, 문경공업고 등 3개교는 조건부 동의를 받아 오는 7월 말까지 보완 절차를 거친 뒤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목포공고는 정원 128명 규모의 AI에너지 분야 마이스터고로 운영된다. 삼성 SDS, 한전KDN, 한국중부발전, BS한양, 인텍전기전자, 세광종합기술단 등이 협약 기업으로 참여한다. 학교는 AI에너지제어과와 AI에너지운영과를 각각 4학급씩 운영하며 발전·배전 설비 운용 전문가와 에너지 기술자, 전기 계측·제어 전문가, 냉난방·공조 분야 기술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해남공고는 정원 80명 규모의 AI산업인프라 분야 마이스터고로 지정됐다. 대한조선, 덕인, 아이티아이즈, 구주기술, 탑솔라, 피에스텍 등이 협약 기업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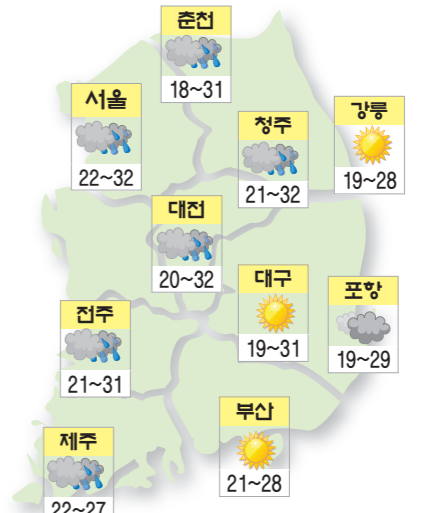
참여한다. 해남공고는 AI인프라운영과 5학급을 운영하며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데이터 분석가, 반도체·전기공학 기술자, 공조 분야 전문인력 등을 집중 육성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신규 지정 학교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학교당 2년간 총 5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첨단 실습실 구축, 기숙사 확충, 교원 전문성 강화 등에 활용된다. 또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단을 구성해 학교 운영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지정으로 전국 마이스터고는 기존

59개교에서 65개교로 확대됐다. 현재 광주에서는 광주자동차설비마이스터고와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가 운영 중이며, 전남에서는 한국항공물류고, 전남생명과학고, 여수석유화학고, 완도수산고 등 4개교가 마이스터고 체제를 갖추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첨단산업 인재 양성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라며 "새롭게 지정된 학교들이 세계적 수준의 기술 명문고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 맑음 05:18 달맞이 07:11
☁️ 맑음 19:49 달맞이 22:11



광주	☁️	21~31
목포	☁️	21~28
여수	☁️	20~29
순천	☁️	20~29
구례	☁️	18~30
광주	☁️	20~28
개남	☁️	20~28
신도	☁️	21~27
죽산도	☁️	20~24
진남	☁️	19~28
진도	☁️	20~26

목포	밀물(고)	03:51 / 15:44
	썰물(저)	09:02 / 21:00
여수	밀물(고)	10:32 / 23:15
	썰물(저)	04:32 / 16:34

택시비 소란·경찰 폭행 50대

만년필 〇:술에 취해 택시비를 내지 않는 등 소란을 피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뺨까지 때린 5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 광주 서부경찰은 16일 공무집행방해·모욕 등의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10시30분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도로변에서 '택시 요금을 안 내고 욕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아.

A씨는 만취 상태로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한 뒤 요금 지불을 거부했다고. 택시 기사가 미타기에 찍힌 요금을 달라고 요구하자, A씨는 욕설하며 돈을 내지 않는 등 시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 A씨는 경찰이 택시에서 내리라는 지시에 불응했고, 심지어 경찰관 2명의 뺨까지 때렸다고. 송태영 기자 sty1235@

화순광업소 하청 노동자 퇴직금 소송 일부 승소 법원, 묵시적 직접고용 인정...7명에 지급 판결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 협력업체 출신 노동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소송에서 법원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홍기찬)는 화순광업소 협력업체 노동자 35명이 대한석탄공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고 가운데 7명에 대해 대한석탄공사가 임금 차액과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급액은 개인별로 2500여만원에서 7500여만원 수준이다. 재판부는 "묵시적 직접고용 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원고들은 석탄공사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상 근로

조건을 적용받아야 한다"며 "협력업체로부터 이미 받은 퇴직금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반면 일부 원고들의 청구는 퇴직 후 3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해 퇴직금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정만으로 별도로 청구하지 않은 퇴직금 채권까지 시효가 중단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화순광업소는 국내 최초 민영 탄광으로 2023년 6월 폐광됐다. 이후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원청인 대한석탄공사가 실질적인 사용자 역할을 했다며 잇따라 소송을 제기해왔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AI와 함께하는 스마트한 일상 16일 오후 광주 동구청 구민 정보화 교육장에서 열린 'AI와 함께하는 스마트한 일상' 컴퓨터 교육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강사로부터 시를 활용하면 글쓰기 교육을 받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유탑그룹 계열사 3곳, 광주서 회생절차 재개 광주회생법원, 9월 15일까지 계획안 제출 명령

광주·전남을 기반으로 성장한 중견기업 유탑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이 연고지인 광주에서 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가며 기업 정상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회생법원은 ㈜유탑건설과 유탑엔지니어링, 유탑디앤씨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법원은 오는 7월 14일부터 8월 11일까지 회생계획·회생담보권 조사기간을 운영하고, 각 회사에 9월 15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채권자는 지지체와 법인 등을 포함해 유탑건설 934명, 유탑엔지니어링 158명, 유탑디앤씨 1488명에 달한다.

주력 계열사인 유탑건설은 지난해 전국 시공능력평가 97위를 기록한 중견 건설사다. 유탑엔지니어링은 광주월드컵경기장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등의 설계·감리를 맡아온 지역 대표 엔지니어링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업계에서는 유탑그룹이 주택·호텔·물류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왔지만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 수익성이 악화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 장기 미분양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위축, 공사비 상승까지 겹치며 경영 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임영진 기자 looks@

직인에 35글자...통합교육청 '도장 고민'

규격상 표기 한계...약칭 쓰자니 지역 소외 우려

7월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직인(도장) 제작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부 부서 직인 명칭이 30자를 훌쩍 넘어서서 현행 규격에 맞춰 제작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전남도교육청과 광주시교육청은 통합교육청 출범을 앞두고 분청과 교육지원청, 산하기관의 명칭 변경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기관 간판은 비교적 쉽게 제작할 수 있지만, 직인의 경우 명칭이 지나치게 길어

현실적인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통합교육청의 공식 명칭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만 12글자에 달한다. 여기에 교육지원청 명칭과 부서명, 회계직위까지 포함하면 직인 문구가 30자 이상으로 늘어난다. 실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동부교육지원청 중등특수교육지원과 일상경비출납원인'은 35글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세입세출 및 현금출납원인'은 33글자에 이른다.

관공서 직인 규격은 서기관급 2cm, 사무관급 1.8cm로 정해져 있다. 이 때문에 직인 명칭을 모두 새기더라도 실제 도장을 찍을 경우 글자가 뭉개져 식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약칭 사용도 쉽지 않다. 특별법상 통합특별시의 약칭은 '광주특별시'지만, 이를 사용할 경우 '전남'이 빠져 지역 소외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육당국은 직인 규격을 유지하면서도 전남과 광주를 모두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약칭이나 표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민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조선대 치과병원 옆 이면도로 혼잡 해결될까

조선대학교 치과병원 인근 이면도로에 장기간 주정차 차량이 몰리면서 차량 교행이 어려워지고 소음·교통혼잡 민원이 잇따르자 광주 동구와 경찰이 일방통행 지정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16일 광주 동구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서석동 주민과 상인들은 서석동 423-11~433-2 구간(서석동 348-9 일원)의 교통 불편을 호소하며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해왔다. 주민들은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도로지만 도로변 불법·장기 주차 차량 때문에 접촉사고 위험과 교통정체가 반복되고 있다"며 단속 강화와 통행환경 개선을 요구했다. 해당 도로는 폭 6m, 연장 147m 규모의 양방향 통행 구간으로 중앙선과 인도 구분이 없다.

그러나 도로 한쪽에 차량이 주차될 경우 차량 교행이 사실상 불가능해 실질적으로는 일방통행로처럼 운영되고 있다. 주변에는 조선대와 조선대 치과병원, 주택가, 음식점, 편의점이 밀집해 있으며 조대여중·고와 살레시오여고도 위치해 있다. 이 때문에 등·하교 시간에는 학부모 차량까지 몰리면서 극심한 정체와 발생 민원의 설명이다. 특히 서석동 421-5번지 부지 주차장이 지난해 10월 유료로 전환된 이후 인



광주 동구 서석동 423-11~433-2 구간이 7월부터 일방통행으로 변경된다.

근 도로변 주차가 늘어나면서 혼잡이 더욱 심해졌다는 지적이다. 주민들은 안전신문고와 교통 관련 부서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단속 위

주정차로 교행 불가...동구, 7월부터 일방통행 추진 인근 주민·상인들, 경적소음·교통혼잡 등 불편 호소

주의 일시적 조치에 그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 주민은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도로지만 장기 주차 차량 때문에 사실상 일방통행만 가능한 상황"이라며 "출퇴근 시간에는 차량이 몰려 불편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민원이 이어지자 동구와 광주동부경찰서는 통행체계 개선에 나섰다. 동부경찰서는 지난 5월21일 열린 '2026년 제1차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구간의 차량 통행체계 변경 의견을 433-2번지 진입부 우회전 회전반경 확보와 함께 진입 방향 기준 우측에는 주차가 가능한 흰색 실선, 좌측에는 주정차 금지를 위한 황색 실선을 설치하도록 주문했다.

동구는 오는 28일까지 서석동 348-9 일원에 대한 일방통행 지정 행정예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동부경찰 관계자는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와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동구 관계자는 "현장 확인 결과 도로 폭이 좁아 주차난과 통행 불편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주차 공간을 확보하면서 원활한 교통 흐름 개선과 보행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일방통행로 지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글·사진=송태영 기자 sty1235@

무등산 수만리~중머리재 구간 시설 개선 공사로 '출입 통제'

무등산국립공원 수만리~중머리재 구간이 시설 개선 공사로 출입 통제된다.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는 오는 7월 중순까지 수만리~중머리재 구간 0.5km에 데크로드 설치와 바둑해 석축 보강 등을 하는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무등산동부 재난취약지역 정비공사 시행에 따른 것으로, 사업비 5000만원이 투입된다. 동부사무소가 정비공사를 추진한 이유는 수만리~중머리재 구간에 토사 유실, 낙석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동부사무소는 7월 중순까지 해당 구간에 조릿대를 심고 돌쌓기 정비, 물길개선 공사, 데크로드 설치 등을 통해 탐방객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미끄럼, 실족 사고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산행 캠페인, 산행준비운동 등 안전산행문화 확산 활동을 추진한다. 송태영 기자 sty1235@